

‘규제 프리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할 수 있나

- 14개 시도별로 지역 전략산업 선정, 지역 인프라 투자와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 -

김영덕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dkim@cerik.re.kr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별 전략사업 육성 계획인 ‘규제 프리존’을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2개씩의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했으며,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각종 규제가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기대는 큰 편이다. 그러나 여

전히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경제특구 개발 등 기존의 지역 개발 정책들이 아직까지 충분한 지역 개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 프리존... 14개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

정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 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각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선정된 산업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규제 완화가 지역에

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핵심 규제를 철폐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시장 창출과 사업화를 위해 시범사업 등을 규제 프리존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 등의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 내용을 보면 첨단의료단지 내 생산 시설이 허용되고,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면제해주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며, 특화 산업 입주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적용 기준을 완화해준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 철폐 건의를 받아 심

사·결정한 뒤, 6월에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환영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커

지자체들은 이번에 발표된 '규제프리존'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규제 프리존' 정책을 환영하는 지자체들은 지역 단위의 전략 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담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지역에 배치된 27개 신사업의 중복성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과감하고 파격적이지 않으면 현실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이번의 발전 방안에 수도권 규제가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크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공장 신·증설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제외로 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의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산업 수요가 크고, 기업과 인력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을 제외시킨 것은 규제 완화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대책은 앞서 규제 프리존을 시행한 일본(2013년 국제전략특구제도)이 도교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없앤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일본의 지방창생 종합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나눠 먹기식의

배분 방식에 의한 산업 육성은 바람직하지 않고 유사성이 높은 산업들이 중복적으로 고려될 경우, 비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美·日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이행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 경제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 이후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접근 방향으로 지역주의를 채택하고, 소비 중심 경제에서 혁신·투자·수출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혁신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 미국 경제개발행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 혁신전략(RIS)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고도 혁신 및 능력 구축을 위해 고안된 새로운 계획이다. 경제발전청(EDA)과 중소기업청(SBA)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SBA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RI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7개 부문(Advanced power, Geo-spatial Flex-matters, Tech-Rich, Smart Grid, Energy storage, Sandiego Defense cluster)의 56개

클러스터 이니셔티브에 매년 각 100만~2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아베정부는 2014년 일본의 지방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동경권 일극 집중 심화가 일본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하에 지방 창생(創生)을 최상위 국가 경제 정책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최상위의 지방 창생을 전담하는 '지방창생본부(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를 설치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재생법」 개정안을 지방 창생 관련 법안으로 제출하여 2014년 11월에 「마을·사람·일창생법」을 제정했고, 2014년 12월에는 지방 창생의 실현을 위해 향후 50년 이후의 장기 인구 전망에 대응한 기본 전략 및 2020년까지의 5개년 종합 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기본 전략에서는 2060년 시점에서 1억명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도쿄 집중을 시정해 지방에서 안심하고 육아가 가능한 환경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략은 젊은 세대의 취업, 결혼, 자녀양육 희망의 실현과 동경 일극 집중 억제,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춘 지역 과제 해결을 통해 각 지역에 대한 매력도를 높여 지방 창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창생 종합 전략의 배경은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약 절반의 시·구·정·촌(일본의 지자체 단위)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창성회의'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저출산이나 도시로의 인구 유출에 대한 지자체의 위기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규제 프리존' 실현을 위한 과제들

벌써부터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간에 전략 산업 선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규제 프리존'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역의 역할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규제 프리존이 기 추진되었던 기업도시나 경제특구 개발 등 성과가 미흡했던 지역 발전 정책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저마다 규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고,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고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

르다. 이는 바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주체인 기업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의 '규제 프리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각종 지역 개발에 저해가 되는 규제들의 완화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둘째로 시의성 있는 추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기존의 기업도시, 경제특구 개발 등 지역 발전 정책들이 그 추진 속도가 현저히 느려 효과가 크게 반감된 사례를 볼 때, 이번 '규제 프리존'은 조속한 시한 내에 법·제도 등 세부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단기에 집중적 투자와 규제 완화책들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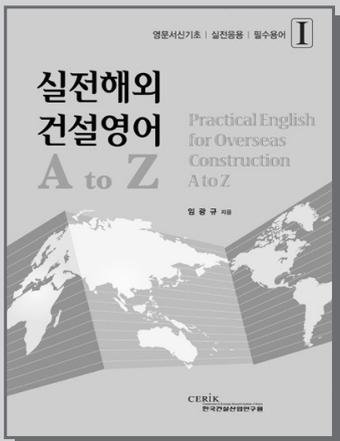
셋째로 '규제 프리존'에 의한 지역 발전이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투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산업 육성 못지않게 이들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된 부산, 강원, 제도의 숙박 공유 허용도 지역적 연계를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

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또한, 현재 지역에 따라서 도로의 연결 구간이 끊겨 있는 구간이 많고,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인프라 사업들이 많은 점에서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수도권외의 규제 완화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 선정된 각종 산업들의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도시 경쟁력의 근간인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CERIK

도 · 서 · 안 · 내

실전해외건설영어 I | 임광규 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건설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건설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5권의 「실전해외건설영어」 출간을 기획하고 이 중 제1권을 발간하였다.

「실전해외건설영어 I」은 영문 서신 작성의 기초부터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400여 건의 영문 서신 사례를 편집, 주석을 달았다.